

# 우상호 “경총회장, 미르 강제모금 시인”

## “청와대 수석발로 시작된 모금... 차은택 씨 권력 농단·이권 독점 드러나... 철저히 증인 채택 막는 행태는 처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미르재단 모금 당시 정부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공세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박 회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사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 반대하지 말아달라며 오히려 사외이사들을 설득해서 30억의 모금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이날자 한겨레가 보도한 박 회장의 발언 내용을 열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

의 본질을 보면 청와대 수석발로 시작된 모금이 대기업과 정부의 해명과 다르게 자발성이 부인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감독에 관해선 “차은택 씨의 권력 농단, 이권 독점도 그 정황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을 미르재단에서 독점한다거나 특정 대기업의 광고 절반 이상을 독점한다거나 이것이 다 이권이 아니겠나. 이런 식의 권력 농단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국감 증인 채택 저지에 대해서 “비선실세로 주목되는 최순실 씨 딸 문제가 전혀 해명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증인들을 철저히 국감감사에서 불로킹하고 있다”며 “이

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삼임위에서 철저히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처음 본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은 헌법 기관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박병원 경총 회장이 지난 해 11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언한 회의록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문예위 위원인 박 회장은 이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억~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고있는 박 회장은 같은 날 열린 포스코 이사회에서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하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박 회장은 또 “(포스코 쪽이)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 간에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가 오갔고 이를 서포트(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것(미르재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코 쪽에서) 이사회에서 추진만 원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부결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도 못 하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뉴스

### 김관영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 제도 검토해야”

5.18 민주유공자가 겪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보훈처 차원의 생계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보훈대상자 개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8.7%(참전유공자 4.6%, 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4.5%), ‘무소득자 비율’은 11.6%(특수임무유공자 4.5%, 국가유공자 유족 3.9%)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규모’도 약 6000만원(보훈보상대상자 4685만원, 독립유공자 3399만원)에 달했다.

5.18 민주유공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가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유공자가 ‘일상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49.9%였다.

보훈보상대상자 38.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37.5%였다.

‘자살충동 경험’을 겪은 비율도 14.8%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11.9%)나 보훈보상대상자(11.1%) 등과 비교해 높았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없다. 이는 1990년 5.18 보상법 제정 당시 일시금 보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의 불법과 폭력으로 아픔을 겪은 5.18 민주유공자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가계 곤란을 겪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 백남기 사망 직후 퇴원기록엔 주치의 백선하 ‘외상상’ 기재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53)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인의 의무기록을 ‘외상상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외상상’ 부분을 제외하고 경막하출혈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유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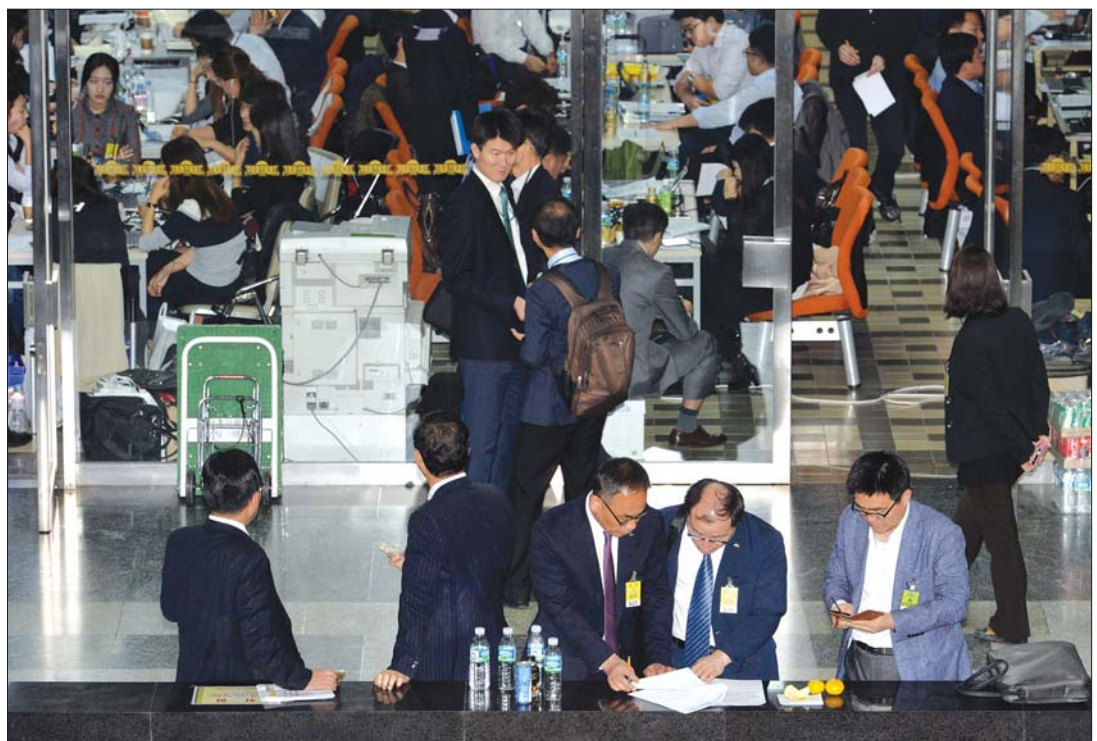
같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진단병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다.

지난 9월25일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해 퇴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일관되게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돼 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2건의 의무기록 모두 백 교수가 직접 확인서명을 한 것이다.

특히 백 교수는 퇴원 의무기록의 상병코드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하는 S0651로 기재했다.

/뉴스



국감 증반전 20대 첫 국정감사가 증반으로 돌아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한 상임위 국정감사장 앞 복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부 부처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새누리 도당 수석대변인에 허남주 도의원 발탁

### 제1차 핵심 당직자 인선 발표... 여성특위장 김영현·청년특별위장 박상준 등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10일 제1차 핵심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인선은 수석대변인에 허남주(55) 도의원, 여성특별위원장에 김영현(60) 전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에 황정희(50), 차세대여성위원장에 손일선(32)씨가 발탁됐다.

이어 청년특별위원장에 박상준(41) 전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에 서종국(43), 미래세대위원장에 이수홍(35)씨가 인선됐다. 전북도당은 허남주 현직 도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향후 언론관계에서 보다 광폭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황정희 전 전주동백로터리 회장과 손일선 디자인 분야 홍보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여성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황 회장은 국제로터리 3670지구에서 총재특별대표를 수행한바 있다. 이화여대 석사과정 중인 손 씨는 디자이너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여성 디자이너로, 전주에서 디자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당직인선에 주력해 왔다. 청년층의 당세 확장을 위해 서종국 전북희망포럼 청년국장을 영입해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에서 청년단체에서 활동해온 이수홍씨를 미래세대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인 박상준씨는

기존 청년당원 관리 및 중앙당과의 청년정책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당은 지난달 12일 운영위원회 열고 개방형 당직인선을 위한 ‘당직인선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또 인선위는 개방형 인사를 통해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의 영입과 발굴을 통해 ‘전북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북도당을 구성하겠다’는 당직인선의 기준을 밝혀왔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당직인선은 실존된 전북의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설명하면서 “전북발전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도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 이현숙·이학수 ‘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공동 발의

도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과 이학수 의원(정읍2)은 11일 개최하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도의회는 그동안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곧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자가 채종을 길을 열어주고 또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GMO 등으로부터 안

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종농작물 육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립하고 시행할 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련 공무원이나 학계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는 도내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정책을 협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의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

성사업과 토종농작물 재배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토종농작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민관정책협의체에서 관련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토종 농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나아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0일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전라북도의회는 11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각종 주요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전라북도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1건(조례안 10, 예산안 1, 동의안 67, 결의안 1, 규칙안 등 2)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민생안정 등 경기 부양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273억원, 특별교부세 66억원, 보통교부세 365억원 등 총 704억원 규모로 일자리·민생안정 분야 143억원, 문화·관광 분야 92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42억원, 농림·환경·지역개발 분야 70억원, 행정·교육·예비비 등 기타분야 357억원을 각각 편성한다.

한편, 제337회 임시회는 10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된다. /신광영 기자

### 정운천, 코트라 청년일자리사업 비효율성 지적 예정

국회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은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코트라의 국감에서 코트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K-Move센터’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해 예산은 15조 8,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연봉 3,000만 원짜리 직원 52만 6,700명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것처럼,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코트라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 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예산부담 대비 취업성사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무직, IT기술직, 서비스직’ 등에 정규직, 계약직으로 한 명 취업시키는데, 13년 약800만원, 14년 약1,260만원, 15년 약1,073만원을 사용한 셈이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김광수 “국민연금 지역인재 채용률 14% 저조”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현행법 상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전주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신규 채용 인원 209명 중 31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 14.8%의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였다.

이 같은 채용률은 ‘2016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추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역 인재를 35% 채용하도록 한 권고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206명의 신규채용 인원 중 12.6%인 26명을 선발했으며 2014년 442명 중 44.5명(시간선택제 근로자 1인당 0.5명으로 합산)인 10.5%를 채용했다.

김광수 의원은 “핵심도시 조성의 목적,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 35% 이상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 박재만 “새만금 산단 석탄재 매립 계획 철회하라”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매립용으로 석탄재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7일 한국중부발전은 석탄재 유해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환경성평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발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산단에 석탄재를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철회를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이번 사전환경성평가 용역 수주는 석탄재 매립 계획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나 다름없어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 1)은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석탄재를 매립토로 활용하기 위해 폄수를 부리고 있다”며 “합법의 탈을 쓴 불법을 자행하려 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농어촌공사의 6공구 직접 매립을 연내에 착공기로 한 것은 6공구 마저 석탄재 재활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과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성 평가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올 경우 내년 초 3공구 대량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광영 기자